다산포럼

불통, 냉전의 유산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지난 1월 초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경제학자들' 모임의 올해 주제는 '제2차 냉전의 예방'이었다. 영국의 경제사학자 로버트 스키델스키는 기조연설에서 "절박한 의료, 교육, 복지서비스를 고갈시키면서 '상상된 위험들'을 경계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일의 사악함"을 질타했다. 그가 염두에 둔 주된 상상된 위험은 러시아 팽창주의였다.

스키델스키에 따르면, 냉전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조지 케넌은 죽음을 몇 년 앞두고는 냉전이 지속된 이유가 서방이 '무조건 항복'에 버금가는 것을 얻을 때까지 소련과의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묻는다. 1952년과 54년 소련이 독일의 중립을 전제로 독일 통일을 용인했고, 1954년에는 모든 체제에 열린 보편적 유럽집단안보조약을 제안했으며, 1955년에는 흐루시초프가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 몇 명인가? 바르샤바조약이 체결된 1955년은, 나토 창립 6년 후 이 모든 제안들이 거절된 직후였다.

스키델스키는 또 질문한다. 고르바초프가 나토를 독일 밖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독일의 재통일을 찬성했고, 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대서양-유럽 집단안보체제를 제안했다는 사실, 그리고 2001년 푸틴이 러시아의 나토 가입을 원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 사회가 외부의 적과 대립하거나 그것을 상정할 때, 정보의 흐름은 쉽게 차단되고 편향된다. 물리적 교전시는 물론이려니와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는 냉전의 경우 또한 그에 못지 않다.

말과 사상의 긴장을 조성해야 하니, 냉철한 계산보다는 도덕적 담론, 곧 상대 진영을 가능한 한 악마로 채색하고 그에 비해 이쪽은 천사로 정당화하는 일이 앞선다. 진실이 호도되고 선전이 진실로 회자되는 일이 그렇게 일상화된다.

정작 문제는 '소통의 부재'란, 어디서 기인했건, 결코 중립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무엇보다 그 부재가 온존, 강화되는 사이에 한 사회의 권력과 부의 배분 상황은 갈수록 뒤틀린다.

가령 우리는 분단 70년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고착시키고, 기득권층과 사회경제적 약자 간의 권력적 편차가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가난이 개인의 성품문제가 되고 불평등이 성장과 효율의 이름으로 방어되고 정당화되는 풍토와 관행에 슬며시 익숙해져 있다.

잘못된 구조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피해자마저도 가해자 윤리를 추종하게 만든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가 일련의 권위주의체제에 길들여지면서 오히려 그것을 찬양하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에 갇히게 된 것,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담론과 관행이 되자 너도나도 지대추구와 약육강식의 경쟁논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그래서 가능해진다. 죄의식이 집단적으로 실종될 때 개인들의 일탈은 기껏 CCTV에 의해서만 제어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구조가 악하면, 사람이 제도의 공백을 당분간 메울 수 있다. 제도가 타협의 산물이고, 한국처럼 타협 자체가 원천적으로 힘겨운 극심한 힘의 불균등 상황에 놓인 사회일수록—이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 운운은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한가!—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제왕적이라고 비판하는 일은 부적절할지도 모른다. 이행 단계에선, 즉 좋은 제도가 들어설 때까지, 우리에겐 영웅적 권력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잠시나마 자리를 내주는 이유는 그가 치열한 자기성찰과 소통으로 스스로를 부단히 경계하고 단속하는 경우에 한한 것이다. 용단이 또한 영단이 아니라면 그것은 치기요 만용이기 쉽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형사 자베르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친절을 베풀기란 쉬운 일이지. 어려운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일세."

그러나 자베르는 과잉된 도덕적 열정이나 사명감에 사로잡힌 맹목적 정의감이 실제론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하물며 그것이 사적 수준이 아닌 공동체의 진운과 관련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주화도 결국 소통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폐라면, 아마 권위주의 시절의 불통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적폐가 으뜸일 터인데, 과연 우리에게 민주화는 일단락 된 문제인가.

특별기고

요우커, 왜 광주·전남을 외면하나?

이 용 섭
중국사회과학원 초빙연구원·전 국회의원

이제 중국을 제쳐놓고는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각 분야에서 '슈퍼 차이나'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관광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급속한 고도성장과 위안화 강세에 힘입어 씀씀이가 커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2012년에 세계 제일의 해외여행 소비국이 됐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본토인의 해외 여행자는 연인원 1억1400만 명이고 해외 소비액은 1400억 달러나 된다. 이중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연인원 634만 여명으로 2013년(약433만명) 대비 46%나 증가했다.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가 한국이다.

문제는 중국 관광객이 이처럼 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특히 호남지역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중 광주지역 방문자는 1.3%인 5만7000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적었다. 전남은 8만여명으로 1.9%에 불과하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 관광객 모셔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득과 고용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역시 이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앞서가는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에 머물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중국 요우커들 시각에서 몇가지 대책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광주 전남에 가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우리만의 '온리원'(only one)을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해야 한다. 불의에 항거해 온 정의로운 역사, 판소리 농악 서화 등 중국과 차별화되는 전통 문화예술, 맛깔스럽고 풍성한 먹거리, 천혜의 2000여개 섬과 자연환경 등을 한데 잘 엮어내면 요우커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한류를 겨냥해 광주전남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제작도 적극 구상해 볼 만하다. 성형 치과 미용 등 의료미용중 경쟁력 있는 분야를 골라 특화하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중국의 3대 음악가인 광주 태생의 정율성 생가를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광주김치축제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둘째 요우커를 겨냥한 쇼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쇼핑하러 한국에 왔다고 답한 비율이 73.8%에 이를 정도로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최대 이유는 쇼핑이다. 그러나 광주 전남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쇼핑 장소, 편의성, 접근성 등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요우커 관광에 필수적인 시내면세점 하나도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에 4개의 시내면세점이 신설되는데 우리 지역은 이번에도 빠져있다. 서울과 경쟁상대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관광객들이 필요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과 시설은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에 오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거리와 비용의 이점에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을 거쳐야만 광주 전남에 올수 있다면 이러한 매리트가 다 사라지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적극 육성해 이곳을 통한 저렴한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상점의 간판과 시내 표지판도 요우커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존 중국 여행객은 주로 호텔에 묵었다면, 최근에는 민박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많이 찾고 있다. 한국의 멋과 맛을 살린 차별화된 숙박 인프라를 보급하는 것도 주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우커 유치를 위해 광주와 전남이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단일 관광권역으로 엮어내도 도시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데 따로 가면 필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설조직으로 '광주전남관광본부'(가칭)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또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젊은 층들을 겨냥해 인터넷 홍보도 다양화해야 한다.

두 단체장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하나가 되고 시도민들이 마음을 다해 뒷받침한다면 요우커들이 '한국 가자'가 아니라 '광주에 가자, 전남에 가자'고 하는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청춘 톡·톡

NGO의 안타까운 '영업'

신 재 선
전남대 산업공학과 2학년·전대신문 기자

찝찝했다. 교문 밖에 자리 잡은 한 환경보호단체가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자판 위에 서류를 늘어놓고 원자력의 위험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잡아채는 모습 속에서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약간의 찝찝함에 목에 뭐가 걸린 듯 집에 오는 내내 꺼림칙했다. 익숙한 풍경인 듯 싶은데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할까.

얼마 지나지 않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조직)들이 마케팅업체들을 동원해서 모금 활동을 한다는 기사를 읽게 됐다. 후원회원을 데리고 오면 약정된 1회 단위 후원금의 4배를 마케팅업체가, 2배를 홍보직원이 가져간다고 한다. 만약 1년 동안 후원을 했다면 반 년 동안의 후원금은 마케팅업체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제야 마음이 꺼림칙했던 이유를 알았다. NGO가 '영업'을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NGO들이 모금 활동에 마케팅업체를 동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적인 업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효율성은 분명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확보한 재정은 NGO가 목표하는 결과를 이뤄내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될 개념이 바로 합리성이다.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목표 달성에 적절한 수단인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NGO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논리는 합리성이다. '영업사원'을 내세운 일부 NGO들은 지금, 합리성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NGO는 순수성과 신뢰성이라는 핵심 가치 위에 존재한다. 하지만 마케팅업체와 얽힌 다음부터는 순수성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한 사람들의 소중한 정성은 마케팅업체와 홍보 직원을 고용하는데 쓰이고, 또 그들은 들어간 비용 이상의 후원금을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금전적 관계 안에서 본래 추구하던 순수한 가치를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영업사원 홍보'가 문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NGO들이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아 같은 목표를 이뤄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후원자 모집이 마케팅 업체에게 넘어간 순간 후원자 모집의 가장 큰 이유는 '돈'으로 귀결된다. 후원자를 데려온 데 따른 수당을 얻기 위한 영업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모금이란 자발적인 행위가 호소로 얻어질지언정 영업으로 얻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NGO의 영업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은 의심과 의문을 만들고 결국 그들을 지탱하던 신뢰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합리성은 효율성의 저하도 야기한다. 합리성의 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후원자에게도 회의를 불러온다. 참여를 권유하는 사람조차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회의감은 때론 후원 정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테고 NGO 활동의 정체를 불러올 것이다. 부족한 후원금을 얻기 위해 NGO는 또 마케팅업체들에 손을 내밀 것이다. 암담한 순환고리다.

안타까운 예감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인 한 명이 학교 후문 NGO홍보부스에서 후원인 신청을 했다. 서류작성을 마친 그에게 홍보부스 관계자가 후원기념 카드를 건네며 "이걸 책상에 두면 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개인의 말실수인지 NGO의 정신을 공유하지 못한 마케팅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알 길은 없다. 혹은 둘 다 일수도. 적어도 나는 '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NGO에 후원을 계속할 마음도, 그들을 지지할 이유도 잃었다. NGO 단체의 순수성과 신뢰는 왜곡되고 훼손되었다. NGO라는 이름을 내 건 이벤트 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한 순간이다.

효율성? 좋다. 하지만 있으면 좋은 하나의 추가요소일 뿐이다. 그들은 열매 하나를 더 따기 위해 뿌리까지 헤치고 있다. NGO의 정신이 여태껏 길러온 순수와 신뢰의 '거목'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땡처리식 영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社 說

무등산 군부대 주둔 근거도 명분도 없다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 이전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일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1187 초록깃발 캠페인'을 벌였다. 이 모임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무려 55개의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정상 복원 캠페인을 매주 1차례씩 무기한으로 이어가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무등산 생태복원 토론회를 개최해 국방부로부터 '부대 이전에 공감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얻어내기도 했다.

무등산 정상을 돌려달라는 지역민의 요구는 지극히 합법적이다. 정상 부근의 토지는 광주시와 화순군, 사찰의 소유이며 국방부는 소유권이 없다. 지난 1966년 주둔한 이후 광주시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마치 시혜처럼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최근에야 정상을 개방하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다.

과거 국가 안보 때문에 주둔했다지만 이제 명분도 잃었다.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산 꼭대기는 의미가 없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얼마든지 방어체계는 구축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부대 이전도 그동안 '새로운 이전 후보지에 건물을 지어주고 현재 사용 중인 정상의 부대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의 광주시 안은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국방부가 자체적인 특별회계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고 이전사업도 주도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립공원 정상의 군부대는 그 자체로 흉물이다. 무등산은 지난 2012년 국립공원 승격 이후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몰려드는 등 명산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정상이 없는 산'이다. 국방부는 시민의 요구에 떠밀릴 게 아니라 자발적 이전작업에 나서야 한다.

문체부 차관 사의, 문화전당과 관련 없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국회에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신성범 교육문화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문체부가 특별법 처리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운영 주체로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체부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맡되, 그 이후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소위에서 여야와 정부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이후 두 차례나 교문위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 정부가 갑자기 반대한 것도 그러하거니와 '광주법' 운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으니 호남 차별임에 분명하다.

특히 지난달 30일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이 돌연 사임을 발표한 배경에는 문화전당과 관련한 압력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안 소위에서 문화전당 특별법을 다룰 때 김 차관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청와대 등의 질책을 받은 것이 그 원인이라는 얘기다. 사실 유무를 떠나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는 게 개탄스럴 따름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금 당장 서둘러도 인력 충원과 콘텐츠 준비가 안 돼 오는 9월 개관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특별법마저 지연되고 있으니 '무늬만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정부 여당은 이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문화전당이 국립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들도 문화전당 특별법 통과와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반대를 한목소리로 낸 만큼 전당대회 후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러브조이 혜성

흔히 '혜성처럼 등장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긴 꼬리를 드리우며 밤하늘에 불쑥 등장하는 혜성은 '우주는 신(神)의 손으로 만들어진 질서정연하고, 변화없는 것'이라는 우주관을 가진 고대인에게 왕조의 붕괴나 전쟁과 재앙의 조짐으로 여겨졌다.

'조선왕조실록' DB에 '혜성'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모두 1291건의 기사가 나온다. 이 가운데 예종 1년(1468년) 10월 24일 기록에는 혜성과 관련해 남이 장군의 역모사건이 언급된다.

사건을 요약하면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 혜성이 나타났을 때 금중(禁中=대궐안)에서 숙직하고 있던 남이 장군이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병조참지(兵曹參知) 유자광이 듣고서 '남이가 역모(逆謀)한다'고 예종에게 모함해 옥사(獄事)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결국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없애리…'라고 읊었던 남이 장군은 모함을 받고 기개를 펼치지 못한 채 27살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고 만다.

이제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혜성을 외경(畏敬)스런 존재로 인식하던 단계를 벗어나 어떤 성분으로 구성됐는지, 또 어디서 왔는지 등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혜성 몸체에 탐사선을 직접 착륙시키는 등 진일보한 방법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태양계 생성 초기의 물질을 고스란히 간직한 혜성을 통해 아직도 미지(未知)의 영역이 많은 우주의 비밀을 하나 둘씩 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러브조이 혜성'(C/2014 Q2)이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을 지났다. 호주 아마추어 천문가 테리 러브조이(49)가 지난해 8월 8인치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발견한 혜성으로, 현재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밝기(5등급)이다. 지구에서 이 혜성을 다시 볼 수 있는 때는 8000여 년 후라고 한다.

잠시 짬을 내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시민천문대를 방문해 페르세우스 자리 인근을 지나고 있는 우주의 진객(珍客)을 한번 찾아보길 권한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